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2019) 주요 문장

프롤로그 :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p.6)
-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게 아닐까? (p.7)
- 모욕적인 말의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표현의 방식도 매우 은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 말하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말이다.(p.8)
- 말을 한 당사자에게 이런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모욕적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걸까? 모욕을 한 사람은 없고 모욕을 당한 사람만 있으니, 모욕을 당한 쪽에서 감내하거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걸까? (p.8)
- 이주민들은 한국인 ‘다 되었다’는 말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모욕적이라고 했다. 또다른 이유도 있는데, 굳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인이 된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였다.(p.9)
- 장애인에게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 역시 전제 때문에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희망을 가지라는 건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했다.(p.9)
- 나를 둘러싼 말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훑는 작업은 마치 세상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다. (...)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는 일 말이다.(p.10)
-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p.11)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 양측 모두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점도 같다. 다만 누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p.20)
-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가 차별받는다 '다수자 차별론'은 어떻게 가능할까? 다수자 차별론을 들여다보면,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과연 차별이 있었더라도 현재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p.22)
-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p.26)
- 이런 호의성(시혜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해위이다.(p.27)
-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p.28)
- 나에게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p.29)
- 선량한 사람들임에 분명한 남성 동료 교수들이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며, 매킨토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특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29)
- 특권을 알아차리는 확실한 계기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이다. (...) 지금까지 누린 특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p.32)
- 불평등이란 말이 그러하듯, 특권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다. (...) 서로 다르게 힘들다고 봐야 한다.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다르게 힘들다. (...) "너와 나를 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공통의 주제로 이어져야 한다. (p.33)
- 사람들은 고통 받고 억압받는 상태에서도 부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p.34)
- 기존에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평등해지는 것이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대의 이익이 곧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사실은 상대가 평등해지면 곧 나도 평등해지는 것이 더 논리적인 추론인데도 말이다. (p.35)

-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기울어진 세계 위에 서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결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 기울어진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p.36)

2장 우리는 한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 앞서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p.42)
- “인간의 마음은 범주의 도움을 받아야 사고할 수 있다. (···) 그래야 질서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p.42)
- 킴벌리 크렌쇼는 교차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 인간이 다면적인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비유해 교차성을 설명한다. (p.54)
-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다.** 고정관념을 갖기도, 다른 집단에 적대감을 갖기도 너무 쉽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p.60)

3장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

- 아무리 조심해서 말해도, 마음을 드러내어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이 질서를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감수하라”고 말한다. 왜일까? (p.63)
-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외부의 시선에서 시작되지만, 그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그 집단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흡수되고 이 고정관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p.66)
-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사회가 부여한 낙인을 자신 안에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다. (···) 차별을 받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부족하고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항을 하지도 않는다. (p.66)
- 실제로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통념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고, 이 부담이 수행을 방해했다. (p.66)

- 실제로 여성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성별 고정 관념에 따라 진로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71)
- 안타깝게도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 여성이 절반을 넘는 직종의 평균임금은 대체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남성이 절반을 넘는 직종의 평균임금은 대체로 200만원이 넘는다. (p.73)
-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p.79)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4장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 방송인 B씨는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응수했다. (...) 흑인 분장의 논란은 “도대체 왜 웃긴가”라는 상당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 웃음을 차별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확대해석’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웃자고 한 말을 우리는 가볍게 웃어 넘겨야 할까? 아니면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할까? (p.84)
-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쉽지 않다. 잘못하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확대해석 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p.85)
-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함, 불행, 부족함, 서툰을 볼 때 즐거워한다고 했다. (...) 조롱의 표현 (...) 우월성 이론이라고 한다. 토머스 홉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p.86)
- 상대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가? 자신과 결코 동일시하지 않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비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즐거운 일이 된다.(p.87)
- 유머, 장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려도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반복된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웃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p.91)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 (미생 식용유 세트)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보다 차별을 당했다는 설움이 앞선다. (p.100)
- 식용유 세트, 여사님, 그리고 사원증 목줄.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 재정적인 이유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애써 구분을 한다. 구분이 목적인 구분이다.(p.102)
- 차별을 정당화하는 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자원이 제한된들 왜 똑같이 나누지 않고 정규직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만일 이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하면 단지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타당한 이유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리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p.103)
- 능력주의는 “누구나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다. 누구든지 노력과 능력으로써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만 한다면 평등한 사회라고 여긴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불평등한 구조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쏘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정의로운 사회다. (p.105)
- 우선 무슨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편향이 없어야 한다. (...) 비장애인은 어려운 듣기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는데, 청각장애인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다. (...) 대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공정해 보이니 말이다. (p.106)
-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의 예들이다. (p.110)
- 내가 유학을 한 학교에는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에게 입학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험시간을 더 주는 정책이 있었다. (...) 로스쿨이니 당연히 언어가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p.110)
-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기에 더욱 편향되게 행동하는 이 현상을 카스티야와 버나드는 “능력주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p.112)
-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며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니다. (...)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요구에 맞춘다면 어쩌면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다. (p.113)
-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 28.3퍼센트의 아동·청소년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불합리한 구분을 일삼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새삼 두려워

진다. (p.115)

6장 쫓겨나는 사람들

- 대중시설에서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하는 순간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 민권법의 주요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차별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 (p.117)
- 차별을 못해서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과 무관하게 의회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결국 경찰은 구수진씨에게 다른 사우나로 가라고 안내하며 주인이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p.119)
- 단체 차별은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도 지나친 형벌이다. (...) 노키즈존, 노스쿨존, 노장애인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진상’ 손님이 성인 남성이라면 과연 ‘성인 남성 금지’라는 표지판을 내세울까? (...) 왜 어떤 집단은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거부되는데, 어떤 집단은 개별적으로만 문제 삼고 집단으로는 문제 삼지 않을까? (p.123)
- 미국이 민권법을 제정하여 차별을 금지시킨 것은 기업이라도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만든 것이었다.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얻은 이익을 오롯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크든 작든 기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이 있다. (p.127)
- 다문화주의는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특정 문화를 우위에 놓거나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배척하는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로 쓰이는 것이다. (p.132)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 아고라는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고라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 남성에게 한정되었고, 여성, 아동, 노예는 배제되었다. 즉 아고라는 “불평등한 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 평등의 장소였다. (p.137)

- 권력자가 방송에서 어떤 소수자 집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의 표현이 아니라 그 소수자를 공공의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는 신호였다. 그가 말한 ‘차별금지’는 동성애자를 아고라 밖으로 추방시킨 후의 평등일 뿐이었으며, “내 존재를 반대하시냐.”라고 외치던 성소수자의 시위는 답장 밖으로 내쳐진 자들의 절규였다. (p.146)
-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영역은 한계선이 있다. (...)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도덕적 가치, 규칙,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세계에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도덕적 배제가 일어난다.” (P.147)
-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주는 제도라기보다 주인이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올 권한을 주는 제도이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을 채용한 주인에게 전속되고, 마음대로 주인을 떠나지 못한다. (...) 고용관계가 오로지 고용주를 위해, 고용주에 의해 결정된다면, 노예제가 아주 먼 남의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P.149)
- 마이클 왈저는 영토 안에 권리가 적거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정”이라고 말한다. (P.151)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8장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 동성결혼에 대한 요구는 동성동본결혼과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사회가 인정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P.163)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 시민 불복종은 일종의 ‘말 걸기’ 행위다. 매우 절실한 형태의 말 걸기다. (P.166)
- 세상이 언제나 공명정대하다는 생각을 바꾸는 대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왜곡하여 이해하기 시작한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169)
- 다수자는 소수자의 의견을 거침없이 공격할 수 있다. 반면 소수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된다. 다수자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잘 말하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사실상 침묵을 강요한다. (P.171)

9장 모두를 위한 평등

- 모든 범주를 없애는 방법으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데, 이 두 가지 속성은 과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걸까? (···) 블라인드 채용 (···) 이런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세상이 평등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평가자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지만, 개인의 편견만 없앤다고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는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과도 싸워야 하며, 개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를 만드는 등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P.177)
- 학자들은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부와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재분배하는 이론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 최소한 누구나 생계를 보장받고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왔다. (P.180)
- 가령 불공정하게 어떤 것에 편견을 갖는 문화적 규범들은 국가와 경제 속에 제도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은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의 문화 만들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는 종종 문화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의 악순환이다. (P.181)
- 사람이 '동등'하다는 평등을 말하기 위해 '차이'를 말하는 건,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면서 여성의 차이를 말하고 여성정책을 만드는 것이 모순되어 보인다. 성소수자,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건 평등이 아니라 우대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P.183)
- 아이리스 영은 억압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류 집단의 입장을 보편적이라고 보면서 비주류만을 다르다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관계적으로 이해해 상대화하는 것”이다. (P.184)
- 존 스튜어트 밀은 1859년에 발표한 자유론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 삶이 획일적인 하나의 형태로 거의 굳어진 뒤에야 그것을 뒤집으려 하면, 그때는 불경이니 비도덕적이니, 심지어 자연에 반하는 괴물과도 같다는 등 온갖 비난과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사람들은 잠시만 다양성과 벽을 쌓고 살아도 순식간에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P.188)

10장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 보편성은 차별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은폐시키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P.197)

- 어떤 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하는 것과, 애초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포함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전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나중에라도 추가될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198)
-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형식적 평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평등한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 특정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 종종 ‘우대’ 조치로 불리며 오해를 사곤 한다. 그 조치가 없다면 불평등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대라고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P.201)